

<동정자료>

손병석 차관, “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없는 시행 강조” 노동계·업계·발주기관·관계부처 참여 간담회…노사 협조·공동노력 당부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11일(금),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노동계, 업계, 관계부처, 발주기관 등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건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
- 이 날 간담회에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민주노총, 한국노총이,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대한건설협회·대한전문건설협회·해외건설협회·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과 종합·전문·엔지니어링 분야 건설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.
-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.
-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“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‘워라벨’의 구현은 물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우리 시대에 꼭 실현해야 할 가치이자,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.”라며,
 - “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안전이 보장된다.”고 강조하면서 “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해 건설업계와 노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 - 또한, “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 등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,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-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주로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비 지급을 위한 조치와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.
- 시공업계는 공공공사에서 공기 준수 등을 위해 돌관공사를 해야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 부족 또는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기연장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- 또한 해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채산성 악화, 외국기업과의 협업 어려움 등으로 인한 수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.
- 건설 엔지니어링업계는 설계·감리 용역에 대한 계약 금액 증액과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준비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
-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휴식이 있는 현장문화 정착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
- 공공공사 공사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국내외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, 해외현장 적용 유예에 대해서는 업계와 입장차를 보였다.
- 손병석 차관은 “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없는 시행을 강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,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.”고 밝혔다.
- 아울러 “의견수렴의 기회를 자주 가져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산업을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.”고 말했다.

2018. 5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간담회 개요

- 時/所 : '18.5.11(금), 14:00~15:30 / 용산 LS타워 4층 회의실
- 참석자
 - (정 부) 국토교통부 제1차관(주재),
건설정책국장, 기술안전정책관,
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,
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,
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 등
 - (발주기관)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
LH공사 주택기술처장
 - (업 계) 대한건설협회·대한전문건설협회·해외건설협회·
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,
GS건설(종합) 부사장,
방림이엘씨(전문) 대표이사,
유신(Eng) 대표이사
 - (노동계)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(민노총) 부위원장,
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(한노총) 사무국장

□ 간담회 내용

-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 의견수렴 및 현장안착 지원 방안 논의